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 권고

CRC/C/OPSC/KOR/CO/1

02 July 2008

1. 위원회는 2008년 5월 23일에 열린 제1323회 회의(CRC/C/SR 1323)에서 대한민국의 최초 이행보고서(CRC/C/OPSC/KOR/1)를 심의 했으며, 2008년 6월 6일에 열린 제1342회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서 문

2.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최초 이행보고서 제출 및 위원회의 사전 질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서면답변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사국 대표단이 건설적인 대화를 위해 필수적인 몇몇 정보가 부족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3. 위원회는 이번 최종 견해가 2003년 1월 15일에 채택된 당사국의 제2차 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CRC/C/15/Add.197)와 2008년 6월 6일에 채택된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최초 이행 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CRC/C/OPAC/KOR/CO/1)와 함께 해석되어야 함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I. 일반 원칙

A. 긍정적인측면들

4. 위원회는 다음의 입법 및 기타 조치들의 채택에 감사한다.

-
- a) 2000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
 - b) 2004년,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 c) 2004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d) 혼인가능연령을 18세로 높인 민법의 개정,
 - e) 청소년 유해환경 종합대책
5. 위원회는 또한 다음과 같은 조치의 신설을 환영한다.
- a) 2006년,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설립
 - b) 200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따른 핫라인1366 설치
6.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 의정서 및 협약에 가입 혹은 비준한 점을 환영 한다.
- a) 06년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 b) 2000년 유엔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
 - c) 2000년, 유엔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 부속,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매매의 예방·억제·처벌에 관한 의정서
 - d) 2000년, 유엔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 부속, 이주자밀수방지의정서

II. 현황자료

Data Collection

7. 위원회는 국가 보고서 및 서면 답변서에 제공된 아동 성폭력 피해자, 아동 성매매 피해자 및 가해자 기소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환영하지만, 통계자료가 성별 혹은 나이에 따라 분석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또한 위원회의 정보에 따르면 아동매매가 당사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매매 피해자에 관한 통계 자료가 없다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또한 자료 수집 및 분석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 간의 조정기능이 결여되어 있음을 우려한다.
8. 위원회는 당사국이 나이 및 성별에 따라 분석된 아동 성매매 및 음란물에 관한 자료가 정책 이행을 평가하는데 주요한 수단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자료의 체계적

인 수집 및 분석의 보장을 위해 중앙 정부 기관 안에 종합적인 자료 수집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통계자료는 또한 범죄유형에 따라 기소와 유죄판결 건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III. 일반이행조치

법률

9. 위원회는 선택의정서가 당사국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이 아동성매매 및 음란물을 다룬 부분을 비롯하여 선택의정서의 조항들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10.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 a) 선택의정서의 조항과 국내법의 완전한 조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b) 판사와 변호사를 대상으로 선택의정서 조항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국가 행동 계획

11. 위원회는 청소년육성5개년기본계획(2002-2006)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의 채택에 주목하는 반면, 두 계획 모두 선택의정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12.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 1, 2 차 아동 상업적 성착취 반대 세계회의에서 채택된 행동선언 및 의제와 세계 공약(1996년 스톡홀름, 2001년 요코하마)을 고려하여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의 논의 및 협력을 통해 선택의정서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 사항의 이행을 국가 전략 및 프로그램에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조정 및 평가

13. 위원회는 2004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립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2006년 3개년 시

범 사업으로 신설된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이행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 간의 효과적인 조정을 위한 상설기구가 부재하는 점을 우려한다.

14. 위원회는 당사국이 선택의정서의 이행에 있어 효과적인 조정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선택의정서의 이행 및 평가를 책임지는 상설기구화하고, 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충분한 재정 및 인적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홍보 및 교육

15. 위원회는 아동 성매매와 음란물에 대한 교육 캠페인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선택의정서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 행한 노력에 감사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집단들을 대상으로 선택의정서의 모든 내용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못한 점과, 선택의정서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일반 대중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 집단에서도 아직 낮다는 점을 우려한다.
16. 위원회는 당사국이 경찰, 검사, 판사, 의료진 및 기타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선택의정서의 이행과 관련된 국내의 모든 전문가 집단을 위한 교육 교재 및 과정 개발을 위해 충분한 자원을 별도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17. 더 나아가, 선택의정서의 제9조 2항에 비추어 위원회는 당사국이 선택의정서에 언급된 모든 범죄의 유해성과 예방 조치에 관한 미디어 및 교육을 이용한 장기적인 인식 제고 캠페인 및 학교 교과 과정을 통해 선택의정서의 조항들을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널리 알릴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공동체와 특히 아동의 참여가 장려되어야 한다.

자원의 배분

18. 위원회는 선택의정서가 다루고 있는 각 분야별 이행에 대한 예산 배분의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19. 위원회는 당사국이 선택의정서에 포함된 모든 분야의 이행을 위해 충분한 자원을 배분할 것을 장려한다. 특히 의정서에서 다룬 범죄의 조사 및 기소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사회 재통합, 보호 및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에 필요한 인적 및 재정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독립 기관

20. 위원회는 당사국이 2008년 2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에 의한 아동의 인권침해에 대해 감시할 권한을 가지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선택의정서의 홍보 및 감시를 위한 아동권리 전담 부서가 없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1. 위원회는 당사국의 제 2차 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의 권고의견(CRC/C/15/Add.197, para. 18)을 다시 강조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선택의정서의 이행을 적절히 감시·증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아동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인식제고 조치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 부서의 신설에 필요한 인적 및 재정 지원을 당사국이 계속해서 보장하도록 권고한다.

IV. 아동 매매,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의 예방(9조 1항과 2항)

선택의정서가 금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한 조치

22. 위원회는 아동 성매매 및 음란물 금지 관련법의 내용에 대한 홍보물 등과 같은 예방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성매매 및 음란물을 포함한 아동 성착취의 근본원인, 특성 및 정도에 관한 내용과 조사가 부족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3.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 성매매 및 음란물을 포함한 아동 성착취 관련 예방 조치를

개발하기 위해 특히 UNICEF, ILO, IOM 및 시민 사회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 성착취의 근본원인, 특성 및 정도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조사를 실시해 문서화할 것을 장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예방조치에 별도의 예산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24. 위원회는 성매매 근절 전담팀이 성매매 예방 계획의 일환으로 2004년 도입해 성매매에 아동을 이용했거나 그런 혐의가 있는 남성들에게 의무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는 "존스쿨" 제도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가해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의 조건으로 복역을 면제 받는다는 것은 성매매 제의, 특히 아동 피해자와 관련된 성매매 제의를 범죄행위로 간주하는 현행법의 제지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25. 위원회는 당사국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고 집행할 것을 장려하는 한편, 선택의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재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계속해 나가기를 촉구한다.
26.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키리바시(Kiribati) 등 남태평양 도서 국가에서 아동 인권 가해국 사례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국가보고서 제74항) 해외 성매매 방지 전담팀이 검찰청과 경찰청 합동으로 구성된 점은 주목할 만하지만, 위원회는 해외원정 아동 성매매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함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7. 위원회는 당사국이 해외원정 성매매 예방을 위한 공공 캠페인에 추가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등 해외 원정 성매매 예방을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당사국은 또한 세계 관광기구의 행동강령을 관광 산업 종사자들에게 배포하고 일반 대중을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책임 관광(Responsible tourism)을 증진하기 위해 관련 당국과 관광산업, NGO 및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28. 위원회는 선택의정서에 언급된 범죄와 관련하여 사이버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을 감사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선택의정서에 언급된 성범죄 중 인터넷 혹은 휴대전화를 포함한 다른 정보 기술 방식을 통해 발생하는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분명하고 종합적인 전략이 결여된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사이버 범죄가 선택의정서에 관련되는 만큼 사이버 범죄의 해결을 위한 조치를 아동의 참여 아래 현행 행동계획 안에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안전한 인터넷 사용에 대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인식제고 강화 조치를 행동 계획안에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V. 아동 매매, 성매매, 아동 음란물의 금지 및 관련 문제들 (3조, 4조 2항 및 3항, 5조, 6조 및 7조)

형사법 및 규제

30. 위원회는 특히 2000년에 제정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2004년에 제정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아동 매매,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대한 아동의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한 점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당사국의 법률이 선택의정서 제2조와 제3조에 포함된 범죄 모두를 적절히 다루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 a) 인신매매 관련 범죄는 형법 제324조와 노동기본법 제113조에 포함되어 있지만, 당사국의 형법에는 책략, 폭력 혹은 다른 형태의 강압적인 수단에 관계없이, 그리고 금전 혹은 다른 형태의 보상과 관계없이 아동 매매를 금지할 수 있는 인신 매매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 b)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에 포함된 아동 성매매 정의에 따르면, 성교를 포함하지 않는 성적 행위나 아동이 성적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았을 경우는 아동 성매매로 정의되지 않을 수 있다.
 - c) 성매매 알선에 관한 형법의 조항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모든 경우에 체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d)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을 포함한 성매매 피해자를 범죄자로 다루고 있으나 이는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6조)고 구체적으로 명시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모순된다.

-
- e)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조 3항에 규정된 아동 음란물의 정의는 성을 주목적으로 한 아동의 성적부위에 대한 표현 또는 가상의 노골적인 성적 활동과 단순히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것은 포함하지 않으며, 이는 선택의정서 제2조 c항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31.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 음란물의 정의에 관한 조항(제2조 c항)을 포함하여 당사국의 국내법이 의정서의 제2조 및 제3조와 완전히 부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 사항들을 권고한다.

- a) 유엔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의 부속 의정서인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매매를 방지, 억제, 처벌하기 위한 의정서를 비준하고 선택의정서에 부합하도록 아동매매를 정의하고 금지 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 b) 아동성매매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에 포함된 아동 성매매 정의를 수정한다.
- c) 수단을 불문하고 아동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을 제공, 조달, 획득 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 d) 아동 성매매 피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 e) 선택의정서 제2조 c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성을 주목적으로 한 아동의 성적 부위에 대한 표현 또는 가상의 노골적인 성적 활동을 아동 음란물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을 개정한다.
- f) 아동 음란물의 배포 의도와 상관없이 단순히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자체를 금지한다.

32. 위원회는 또한 특히 아동 매매,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과 연관된 행위에 대한 책임자의 기소 및 처벌을 포함하여, 선택의정서에 언급된 범죄와 관련된 법률의 집행력이 미약함을 우려한다.

33. 위원회는 당사국이 선택의정서에서 언급된 모든 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이며 신속한 수사, 기소 및 유죄 판결을 보장하도록 권고한다.

34. 더 나아가,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3조 1항이 예시하는 범죄에 대한 법인책임을 규

정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당사국의 보고서가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35. 선택의정서의 제3조 1항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선택의정서에 언급된 범죄에 대한 법인책임을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입양

36. 위원회는 국내 및 해외 입양이 한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해, 선택의정서의 제3조 1항 (a)(ii)의 승인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표명과 협약 제21조의 유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의 법률이 선택의정서 제3조 1항 (a)(ii)에 따라 아동매매를 금지하지 않는 점을 우려한다.
37. 위원회는 당사국이 선택의정서 제3조 1항(a)(ii)에 대한 입장표명 및 협약 제21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국가간 입양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의 비준검토를 강력히 권고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이 선택의정서 제3조 1항 (a)(ii)에 명시된 행위들을 매매행위로서 당사국 법에 의해 금지하도록 권고한다.

사법권 및 범죄인 본국 송환

38.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3조 1항과 관련된 범죄가 한국인 혹은 한국에 상주하는 이에 의해 외국에서 행하여졌을 때, 또는 피해자가 한국인일 때, 해당 범죄에 대한 치외법권의 확립을 위한 조치에 대한 정보가 당사국에 의해 제공되지 않음을 우려한다.
39. 선택의정서 제4조 2항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범죄가 한국인 혹은 한국에 상주하는 이에 의해 행하여졌을 때, 또는 피해자가 한국인일 경우, 당사국이 해당 범죄에 대한 역외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VI. 아동피해자의 권리 보호 (8조, 9조 3항과4항)

선택의정서에서 금지한 범죄의 아동 피해자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40. 당사국은 아동성매매 피해자가 기소될 가능성이 낮다고 하지만, 위원회는 『성매매 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 아동 성매매 피해자를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41.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 사항들을 권고한다.
- a) 선택의정서에 언급된 어떤 범죄의 아동 피해자도 범죄자로 취급되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법률 개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또한, 아동 피해자의 낙인 및 사회적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b) 아동 피해자를 위한 법적 대리 기능의 개선을 위해 소관 당국에 충분한 재정 및 인적 지원을 한다.
 - c) 선택의정서 제9조 4항에 의거하여, 당사국은 의정서에 명시된 범죄의 아동 피해자가 법적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d) 현존하는 아동 상담전화(1577,1391,1388)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검토한다. 통합 상담전화는 재정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고, 아동들의 접근성 확보와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언어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 아동 관련 NGO, 보건인력, 사회 복지사와 상담전화 사이의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 e) 의정서 제9조 3항에 비추어, 특히 아동 피해자에게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 피해자의 사회 재통합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을 보장한다.

형사 사법 제도의 보호 조치

42. 위원회는 아동이 16세 미만인 경우 비디오 녹화를 통해 진술을 확보하게 한 점은 환영하지만, 이 제도가 16세-18세 사이의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범죄의 아동 피해자가 불분명한 법적 지위로 인해

아동 범죄자로 간주되거나 이로 인해 형사 사법 제도 내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

43. 당사국은 아동 피해자와 범죄 행위 목격자를 포함하는 사법 관련 사항들에 관한 가이드라인(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005/20)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들을 실시하여야 한다.

- a) 아동 피해자가 청소년 범죄자로 간주되거나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 피해자에게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충분하고 확실한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 b) 아동 피해자의 개인적인 이익이 결부된 소송절차의 경우, 이들의 견해, 욕구 및 우려사항이 제시되고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 c) 사법처리과정 중 겪을 고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을 위한 특별 면담실 및 아동 친화적인 심문 방식의 사용, 면담, 진술 및 심리 횟수의 축소를 포함한 아동 친화적인 절차를 사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디오 녹화를 통한 진술 방식을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 d) 어린 성착취 피해자의 나이가 불분명할 경우, 이를 성인이 아닌 아동으로 추정한다.

피해자의 회복 및 재통합

44. 위원회는 2004년에 제정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명시된 조치들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지금까지 선택 의정서에 언급된 범죄의 아동 피해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행해 온 노력과 당사국의 추가적인 성매매 상담센터 설립 계획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아동 피해자의 사회 재통합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조치들이 불충분하며, 이들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체계가 없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또한 현존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여성 및 여자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어로만 제공된다는 점을 우려한다.

45. 더 나아가, 위원회는 성착취 피해자들에게 선별기관을 통해 4주 이상 "교정 교육"을

실시하는 회복 및 교정 프로그램이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지, 자발적 참여가 아닐 경우 이에 대한 형법 혹은 민법 절차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당사국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특히 이런 프로그램이 아동 성착취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에 사실상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46. 위원회는 당사국이 선택의정서에 언급된 범죄에 취약한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 피해자의 완전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회복을 돕기 위해 아동의 완전한 참여 아래 충분하고 적절한 행정 조치, 사회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여자 아동뿐 아니라 남자 아동을 위한 재활 조치를 제공하며, 특히 아동 성착취 및 매매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들을 참조하여 다양한 언어로 재활 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위의 프로그램들이 아동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47.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다음 보고서에 아동 성착취 피해자의 "교정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세부정보를 제공하고, 그 프로그램이 선택의정서 8조, 소년사법의 아동권리에 관한 일반 논평 10호(CRC/C/GC/10) 및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유엔가이드라인 (리야드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동 피해자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 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VII. 국제 지원 및 협력 (10 조)

다자, 지역 및 양자 협정

48.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수의 국가에서 선택의정서의 이행과 관련된 국제협력 사업을 지원함을 환영하며, 당사국이 위원회가 선택의정서와 관련하여 이들 국가들에 대해 채택한 관련 최종전해를 고려하여 더욱 국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촉구한다.

VIII. 후속조치 및 홍보

후속조치

49.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번 권고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권고사항에 대한 적절한 관심과 추가 행동을 위해 권고사항을 정부부처, 국가 위원회, 국회의원 및 지방당국에 전달할 것을 권고한다.

홍보

50. 위원회는 선택의정서와 이의 이행 및 감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보고서, 서면답변서 및 관련 권고사항(최종견해)을 인터넷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반 대중, 시민사회단체, 미디어, 청소년 및 전문가 집단에게 널리 배포하기를 권고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학교 교과과정과 인권 교육을 통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선택의정서를 널리 홍보하기를 권고한다.

IX. 다음 보고서

51. 제12조 2항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선택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추가 정보를 협약 제44조에 따라 2008년 12월 19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아동권리협약 제3·4차 통합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청한다.

(전문번역: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